

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2. 12.(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1. 12.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536호)

나. 회부일자 : 2025. 11. 14.

다. 상정일자 :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5. 11. 21.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한재헌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령에 규정된 출연금을 202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고, 출연금 지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 12,430천원
-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과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등을 운영하며 각종 지방세 세제개편 등의 기초연구자료를 제공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 제18조
-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주요 내용

-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¹⁾에 따라 지방세 제도와 행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도록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 2026년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²⁾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³⁾은 지방세 연구·평가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

1)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 12. 29.>

2)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 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적용해 해당 기금을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4)에서는 적용 비율을 '1만분의 1.2'와 '1만분의 0.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합산한 수치로 규정하고 있음.

- 2026년도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124,299,562천원)의 1만분의 1에⁵⁾ 해당하는 1,243만원임.

〈연도별 출연금 추이〉

(단위: 천원)

2026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12,430	14,632	16,025	14,178	13,081

나. 종합 검토 결과

- 본 동의안은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 행정 전문성 제고를 위해 법령에서 정한 출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 규모 또한 같은 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사료됨.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정책 분석, 세제개편 연구, 지방세 공무원 교육 등을 수행하며 지방세제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 해당 기관에 대한 출연은 지방세수 확대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반 확보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5) 출연금 산출근거 : 연구원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법정 출연비율 인하(1만분의 1.2 → 1만분의 1.0), 관련 법령 '25년 말 개정 예정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2. 12.(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1. 12.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537호)

나. 회부일자 : 2025. 11. 14.

다. 상정일자 :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5. 11. 21.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홍지현 안전생활국장)

가. 제안이유

-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2018년 1월 1일 인상 이후 7년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간 인건비, 유류비, 장비유지비 등의 상승으로 실제 서비스 원가와 현행 수수료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공공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수수료 인상이 필요함에 따라 [별표 1]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인상

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1)

1) 기본요금 2,100원(9.3%) 인상 (22,500원 → 24,600원)

2) 초과요금 365원(17%) 인상 (2,150원 → 2,515원)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09. 25. ~ 2025. 10. 15.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 개요

- 본 개정안은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인건비·유류비 등 원가 상승 요인에 맞추어 현실화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

- 안 [별표 1]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부문 중 기본 부과금액 22,500원 → 24,600원으로, 초과 부과금액을 2,150원 → 2,515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분뇨 및 할증요율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임.

<별표1 개정 사항>

현행					개정안				
[별표 1] <u>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u> <u>부과기준(제9조제1항과 관련)</u> 〔단위 : 원〕					[별표 1] <u>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u> <u>부과기준(제9조제1항과 관련)</u> 〔단위 : 원〕				
구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고	구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고
분뇨		18ℓ	280		분뇨		18ℓ	280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기본	0.75m³	22,500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기본	0.75m³	24,600	
	초과	0.1m³당	2,150			초과	0.1m³당	2,515	
	지하 할증	정화조 청소요금	7%			지하 할증	정화조 청소요금	7%	
	야간 할증	정화조 청소요금	7%			야간 할증	정화조 청소요금	7%	
	공휴일 할증	정화조 청소요금	7%			공휴일 할증	정화조 청소요금	7%	

- 성북구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는 2018년 이후 7년간 동결되어 인건비, 차량 유지비 등 물가상승 요인이 반영되지 못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관련 운반 대행업체로부터 수수료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한편, 서울특별시의 ‘분뇨 수집·운반 원가분석 용역(2023.5.)’ 결과에 따르면 성북구의 경우 기본요금 33.8%, 초과요금 33.5% 인상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권고 되었으며, 본 개정안은 해당 권고안보다 완화된 수준에서 인상안을 마련한 것임.

<서울시 분뇨수거 원가분석 결과('23. 5.)>

구 분	정 화 조	
	기본요금(0.75㎥)	초과요금(0.1㎥)
현 재	22,500원	2,150원
서울시 원가분석 권고안	30,100원(33.8%)	2,870원(33.5%)

- 본 인상안은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것으로, 장기간 동결된 수수료를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여 공공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임.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동 수수료는 2018년 이후 7년간 동결되어 인건비 상승 등 물가 인상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실정임. 또한 서울시 관련 용역 결과에서도 인상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주민의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서울시 권고안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개정안은 수수료 인상의 필요 요건을 충족하고 합리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가)성북 청년 뷰티 창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2. 12.(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1. 12.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540호)

나. 회부일자 : 2025. 11. 14.

다. 상정일자 :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5. 11. 21.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홍지현 안전생활국장)

가. 제안이유

- 지역 청년 창업 거점시설로서 26. 1월 준공 예정인 「성북 청년 스마트 창업 센터」 내 ‘(가)뷰티창업센터’ 운영에 있어 다변화하는 청년 욕구에 맞춰 점차 확대되는 청년정책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풍부한 청년 인프라를 보유하고 그에 따른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의 위탁) 및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승인 및 동의)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 시설명 : (가)성북 청년 뷰티 창업센터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1245-1~3, 5층
- 위탁기간 : 2026. 3. ~ 2028. 12.(2년10개월)
- 주요시설 : 헤어·메이크업·네일 등 실습·교육공간 / 소기업 입주실 / 사무실 등
-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
- 위탁내용
 - 뷰티 산업 (예비)초기 창업자 대상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뷰티 산업 (예비)초기 1인 창업자 대상 보육 지원
 - 관내 청년 대상 뷰티 관련 강좌 개발 및 운영
 - 센터 및 프로그램 등 홍보사업 및 시설관리·운영
 - 그 밖에 청년 뷰티창업 관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위탁비용 : 100,000천원 (26년도 기준 / 10개월 운영 예정)
- 수탁 참가 자격
 - 뷰티 창업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관련 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또는 법인
 -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 분야에 경험과 적정한 능력을 갖춘 관련 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또는 법인
 -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는 관련 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또는 법인
 - 정치적, 종교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은 제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립 중인 ‘성북 청년 스마트 창업센터’ 내 위치한 뷰티 관련 창업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뷰티 산업 관련 전문적인 경험과 풍부한 인프라를 보유한 자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성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함
- 관내 뷰티 관련 인프라 연계를 토대로 뷰티 관련 아카데미 과정부터 창업 기업의 보육 및 지원까지 연계된 체계적인 창업환경 지원으로 지역 내 실질적인 창업기업 배출을 활성화하고자 함

다. 참고사항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5조(시설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주요 내용

- 본 동의안은 ‘(가칭) 성북 청년 뷰티 창업센터(이하 ‘창업센터’) 운영사무를 민간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창업센터’는 「성북 청년 스마트 창업센터」 내에 설치되어 2026년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사무를 청년 인프라와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체결일로부터 2년 10개월간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민간위탁하려는 ‘창업센터’에 관한 사무와 위탁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뷰티 산업 (예비)초기 창업자 대상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뷰티 산업 (예비)초기 1인 창업자 대상 보육 지원
 3. 관내 청년 대상 뷰티 관련 강좌 개발 및 운영
 4. 센터 및 프로그램 등 홍보사업 및 시설관리·운영
 5. 그 밖에 청년 뷰티창업 관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칭)성북 청년 뷰티 창업센터 현황

☐ 위치 및 규모 : 성북 청년 스마트 창업센터 5층(길음동 1245-1 외)

구분	용 도	면적(m ²)	입주시설
옥상	옥상정원(공유마당)	-	
5층	뷰티 창업센터, 소기업 입주실(1실/8석)	242.87	
4층	소기업 입주실(3실/24석), 소회의실(2실), 멘토링룸	242.87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3층	1인 창조기업 입주석(32석)	242.87	
2층	대회의실(교육장), 소기업 입주실(1실/8석), 자유석(8석), 소회의실(2실)	242.87	
1층	사무실(8석), 전시·휴게·공유·교육공간, 카페테리아 등	222.81	길이음
지하층	주차장(7면/경차전용 1면 포함), 기계실, 창고(3실)	298.61	
계		1,492.9	

- ☐ 주요사업 : 뷰티 창업 관련 교육 및 보육지원 / 콘텐츠 스튜디오 등 제공
- ☐ 주요시설 : 헤어·메이크업·네일 등 실습·교육공간 / 소기업 입주실 / 사무실 등
-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 ☐ 운영인력 : 2명(센터장 1, 직원 1명)
- ☐ 위탁예산 : 100,000천원
- ☐ 위탁기간 : 2년 10개월
- ☐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적격심사 후 수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 근거 및 타당성

-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5조제3항6)은 각각 지원센터 및 청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창업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은 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 또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7)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창업센터 운영’은 뷰티 창업 및 청년정책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민간위탁 사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위탁기간 및 선정방법의 적정성

- ‘위탁기간’은 2년 10개월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6조 제1항8)에서 정한 3년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기간 설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선정방법’은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9)에 따

-
- 6)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성과 의지를 갖춘 연구기관, 산학 협력단, 그 밖에 비영리 법인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위탁기관의 선정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5조(시설 설치 및 운영) ③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6조(위탁기관 등) ① 청년 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

라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걸쳐 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선정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나. 종합 검토 결과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 구의회 동의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창업센터’의 특성상 뷰티산업에 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수탁기관 선정 시 해당 분야의 전문성 및 사업 수행 역량의 면밀한 검토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3.)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6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2. 12.(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1. 12.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541호)
나. 회부일자 : 2025. 11. 14.
다. 상정일자 :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5. 11. 21.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근수 행정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성북구와 경찰서 상호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자치경찰사무 지원사업(안 제6조)
- 자치경찰사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9. 25. ~ 2025. 10. 15.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제정 취지

- 본 제정안은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성북구와 경찰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취지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 밀착형 치안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 제도로, 2021년 6월 시행 이후 광역단위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해왔음. 그러나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보호 등 지역 맞춤형 치안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기초단위인 성북구와 경찰서의 역할과 참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성북구는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자치경찰 사무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나. 조문 검토

- 안 제1조(목적)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정의)는 ‘자치경찰사무’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였음.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와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구청장이 지역 실정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다른 조례와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 규정으로 인한 행정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 안 제5조(지원계획)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정책과의 연계 및 구민 의견 반영, 성북·종암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 근거를 마련함.
- 안 제6조(지원사업)에서는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는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구의회 등 지역 내 주요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제도화하고, 실무협의회는 「성북구 치안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치안협의회와 연계·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확대된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기초단위에서의 실질적 지원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 비록 자치경찰사무는 광역자치단체 소관이지만,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제2호가목¹⁰⁾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범주에 해당하는 지원·협력 사무는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또한 법제처 역시 기초자치단체가 자치경찰사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해석례¹¹⁾를 제시하고 있음.

10)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11)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질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는 내용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증평군의 조례에 정할 수 있는지?

【답변】「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이 때 '그 사무'란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치는 소관 자치사무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이러한 소관사무 원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경우에도 적용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4. 11. 7. 의견제시 14-0230 참조).

먼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하고(제1항),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경찰법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사무가 기본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협력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법제처 2024. 10. 29. 의견제시 24-0358, 법제처 2023. 12. 29. 의견제시 23-0333, 법제처 2018. 9. 21. 의견제시 18-0181, 법제처 2018. 9. 21. 의견제시 18-0179 참조). 또한, 경찰법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자치경찰사무가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사무에 대해 별도로 소관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본 제정안은 상위법상 권한 배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재정 지원을 수반하는 사안인 만큼 구 재정 여건과 광역사무인 자치경찰 사무와의 역할 분담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됨.

〈표1. 서울시 자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현황〉

지 역	지자체 명
서울 (18개구)	도봉 · 금천, 강북, 강동, 서대문, 관악, 마포, 동작, 영등포, 중랑, 강서, 은평, 노원, 동대문, 양천, 종로, 강남

이상의 점들을 고려하면, 자치경찰사무의 본질적인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경찰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2. 국가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사무 비교〉

국가경찰사무 (법 제4조제1항제1호)	자치경찰사무 (법 제4조제1항제2호)
<p>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p> <p>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p> <p>3. 범죄피해자 보호</p> <p>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p> <p>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p> <p>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p> <p>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p> <p>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p> <p>단,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p>	<p>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p> <p>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p> <p>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p> <p>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p> <p>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p> <p>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p> <p>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p> <p>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p> <p>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p> <p>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p> <p>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p> <p>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p> <p>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p> <p>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p> <p>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p> <p>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p> <p>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p> <p>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p> <p>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p> <p>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p> <p>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p> <p>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p> <p>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p>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2. 12.(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1. 12.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542호)

나. 회부일자 : 2025. 11. 14.

다. 상정일자 :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5. 11. 21.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근수 행정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변화하는 행정서비스 및 정책 환경에 따른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 중심 조직 운영을 위해 일부 조직체계를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동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한시기구 운영 종료에 따른 내용 반영(안 제2조)
 - ‘단장’ 직위 및 ‘단’ 기구명 삭제
- 한시기구 조항(현행 제5조) 삭제
- 부서 신설에 따른 기구 반영(안 제7조)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10. 16. ~ 2025. 11. 21.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 개요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한시기구로 설치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25. 12. 31.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추진단이 수행하던 정비사업 기능을 도시관리국 내 정식기구인 ‘신속도시정비과’로 전환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비사업 행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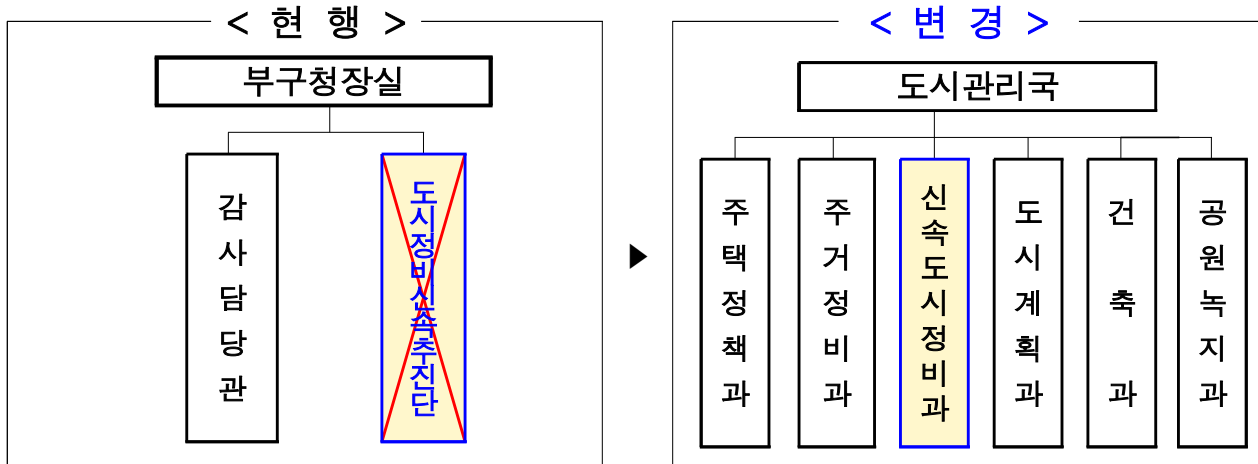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 추진단은 정비사업 갈등관리 수요 증가와 공모방식 등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변화한 도시정비사업 환경에 맞춰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가 필요해짐에 따라 부구청장 직속 한시기구인 추진단을 폐지하고, 도시관리국 내 정식기구인 ‘신속도시정비과’를 신설하려는 것임.

- 이번 개편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중·장기적 관점을 확보하여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주거정비과와의 업무 경계 모호성 등 구조적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됨.

< 조직개편(안) >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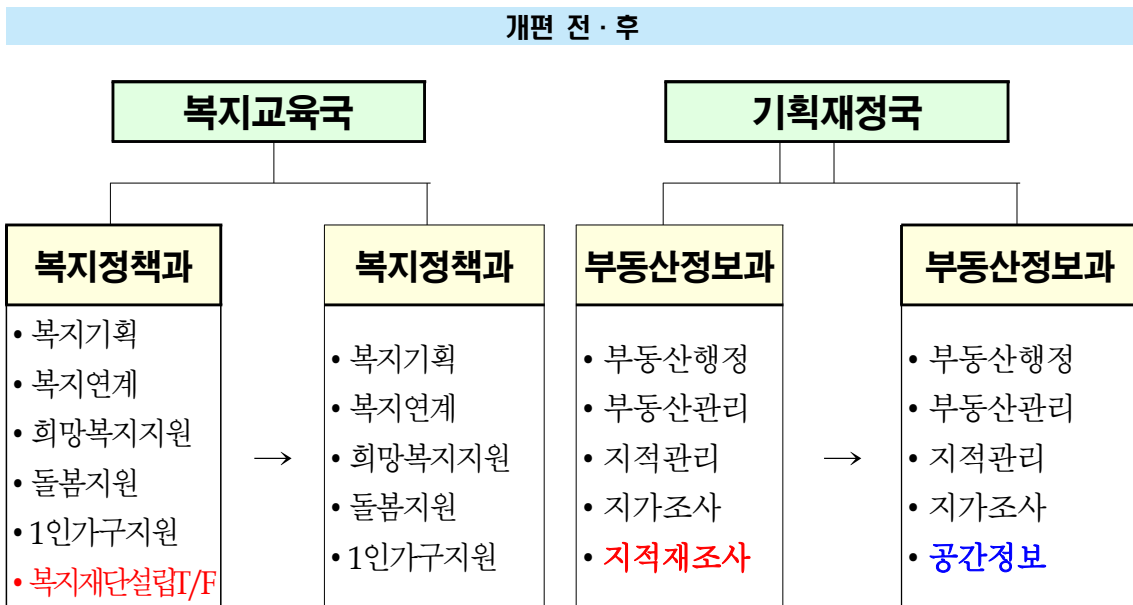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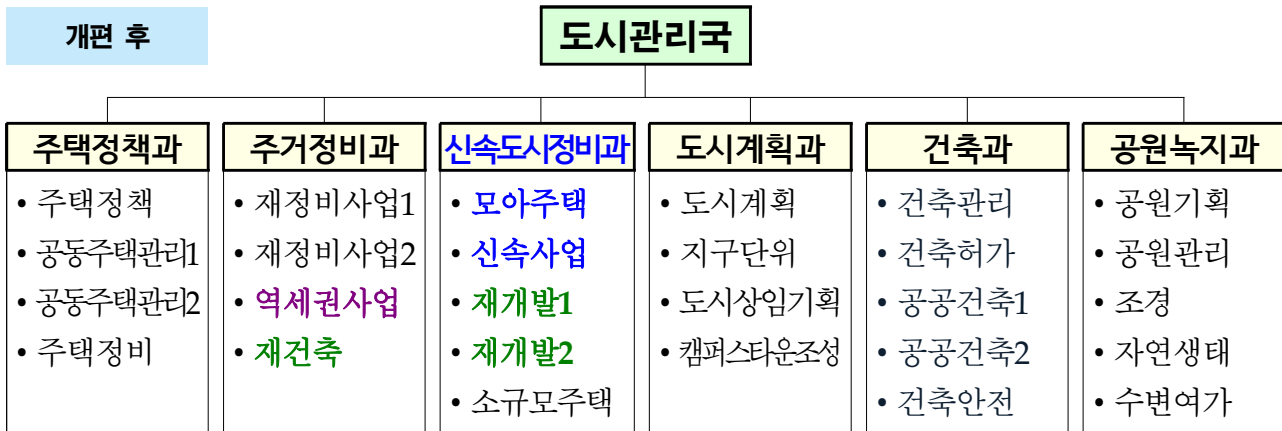
- 안 제2조와 제5조는 추진단 운영 종료에 따라 '단장' 직위와 '단' 조직 명칭, 그리고 한시기구 설치 조항(제5조)을 삭제한 것으로,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적정하다 사료됨.

<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현황 전·후 비교>

구 분	개 편 전	개 편 후	비 고
구분청	6국 1단 1담당관 31과(152팀)	6국 1담당관 32과(151팀)	1단 감소 1과 증가 1팀 감소

- 안 제7조는 추진단 종료에 따라 그 기능을 도시관리국 체계 내에서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속도시정비과를 신설한 것으로, 이는 추진단이 수행하던 주요 기능을 정식조직에서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 신설되는 신속도시정비과는 재개발·모아타운·소규모정비 등 단위사업을 전담하고, 주거정비과는 광역·제도 중심 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고 주민 대응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신속도시정비과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국 기구 전·후 비교〉



- 그 밖에 성북복지재단 설립(25.07.01) 준비를 위해 설치된 복지정책과 내 복지재단설립T/F팀을 폐지하고 부동산정보과 내 지적재조사팀을 공간정보팀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이는 실제 업무를 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려는 조치로 적절하다 사료됨.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한시기구로 운영되던 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대응하여, 정비사업 행정체계를 정식기구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 종합적으로 이번 개정은 한시조직 종료, 정식기구 신설, 관련 조직 기능조정을 반영한 개편안으로, 행정효율성 및 주민편익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02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2. 12.(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1. 12.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543호)

나. 회부일자 : 2025. 11. 14.

다. 상정일자 :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5. 11. 21.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근수 행정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문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성북구의 풍부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정책을 수립·보급하여 주민들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문화적 소양 함양 및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성북문화재단의 사업, 예산, 인력을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문화정책 개발 및 문화자원의 발굴,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 성북구 문화자원 발굴과 성북구 2030 문화비전 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통한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
도모

- 성북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현황에 대한 수요조사 및 연구를 통해 성북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들에 대한 문화서비스의 질적 향상 추구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성북 문화예술 공동체 만들기
 - 지속 가능한 성북구 대표 문화축제 개최 및 기획 공연·전시 활성화 추진
 - 다양한 영상문화·생활문화·가족문화 콘텐츠 활성화
 - 구민 참여를 통한 동네별 예술마을 만들기 추진
 - 지역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및 예술인·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 내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 확대
-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시설, 도서관, 미술관, 영화관 등)
 -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구민 문화서비스 증진에 기여
 -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구민의 문화예술적 소양 함양 증진에
기여하고 문화 격차 해소에 노력
 - 문화시설의 문화예술거점 역할을 통해 지역문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공공 공간으로서 주민 친화공간으로 운영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주요 내용

□ 개요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¹²⁾에 따라 2026년도 성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 의사결정¹³⁾을 얻고자 제출되었음.
- 성북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문화정책 개발, 문화예술 지원, 문화복지 증진 등 성북구청장이 위탁·지정하는 사업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출연 근거

- 성북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¹⁴⁾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교부가 가능하도록 한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¹⁵⁾은 구청장이 예산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연에 필요한 법적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판단됨.

-
- 12)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13) 출자·출연에 대한 지방의회 사전의결 의무화 규정 : 2014. 5. 28.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은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의무화하였고, 이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016회계연도부터 출자·출연금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고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취지임.
- 1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운영재원 등) ②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출연 규모

- 2026년도 출연금은 정책사업 및 신규사업 추진,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증가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8.4%인 16억 7,013만원이 증액된 214억 5,644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출연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 26년 예산(안)	' 25년 예산	증 감	증감률
일반회계	총 계	21,456,444	19,786,314	1,670,130	8.4%
	문화체육과	4,703,750	3,654,888	1,048,862	28.7%
	기획예산과	16,752,694	16,131,426	621,268	3.9%

- 특히 문화체육과 출연액 증가는 야외도서관 확장 등 신규사업, 지역축제 프로그램 확대 및 노후 시설보수 등에 따른 증가분이 주된 요인으로 보이며, 기획예산과는 재단 운영의 필수경비 중심으로 증액 편성됨.

나. 종합 검토 결과

- 본 출연 동의안은 성북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출연의 목적과 절차 등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동의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회의 사전 동의는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및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닌바, 출연 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026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2. 12.(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1. 12.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544호)

나. 회부일자 : 2025. 11. 14.

다. 상정일자 :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5. 11. 21.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근수 행정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방송 콘텐츠의 직접 제작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관계법령 및 업무협약에 따라 2026년도 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개정 2014. 5. 28.)

-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법」 제90조의2제5항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본조 제7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
-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상호 체결한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제4조에서 센터 운영비의 20%는 성북구가 분담하기로 하였음
 - 운영비 분담비율 : 방송통신위원회 60%, 서울시 20%, 성북구 20%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주요기능
 - 시청자 미디어교육·체험 및 홍보 지원
 - 시청자의 영상 및 방송제작 지원 및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 시청자 권익증진 활동지원 및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주요 내용

□ 개요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¹⁶⁾에 따라 2026회계연도 서울시청자미디어

16)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 한다)는 2015. 12. 15.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 제고와 권익 증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성북구,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시설임.

□ 출연근거

- 미디어센터에 대한 출연 근거는 「방송법」 제90조의2제7항 및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제4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2017회계연도 부터 의회 동의를 얻어 운영비의 20%를 분담하고 있음.

「방송법」 제90조의2제7항, 업무협약 제4조제1항제2호

- *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 「업무협약」 제4조(운영비 분담) ①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를 분담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 출연금 현황

- 2026년도 미디어센터의 총 출연금은 15억 2,772만원이며, 성북구 출연금은 인건비 단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1.88%인 564만원이 증가된 3억 554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출연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 26예산(안)	' 25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05,544천원	299,900천원	(증)5,644천원	(증)1.88%
인건비	85,637.5천원	82,700천원	(증)2,937.5천원	(증)3.55%
경상비	219,906.5천원	217,200천원	(증)2,706.5천원	(증)1.25%

나. 종합 검토 결과

-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방송법」 및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